

□공동대표: 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 김호 □정책위원장: 임효창 □사무총장: 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f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실련
- 문의 : 경실련(중앙) : 윤철한 국장(02-741-8565)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 유병욱 사무국장(031-253-2266)
인천경실련 : 김송원 사무처장, 김성아 국장(032-423-2950)
- 시행 : 2021.05.10(총7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



※ 수도권매립지 위치도(출처 : 이데일리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021.4.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6246629016448&mediaCodeNo=257>

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오세훈 "文대통령에 수도권매립지 중재 지원 부탁했다"
 (2021-04-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5148&cID=14001&pID=14000
서울시장 만난 한정에 환경부 장관 "매립지, 적극적 중재·조정"
박남춘 인천시장 "책임 있는 합의를"
 (2021-04-26)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425010004991>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에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수도권매립지합설추진위원회 및 타당성분석 ('72)

수도권매립지 조성건설 대책회의 (환경부, 3개 시·도, 중앙연구원)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설립 ('91.11)

제1회 매립지 반입시설 노후정기조사 등 수도권쓰레기회포합입 ('92.12)

수도권쓰레기처리시설 확충사업

대통령 보고 ('87.7)

※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의 '수도권매립지 관할권 이관 결정에 대한 의견' 中 발췌

※ 4자 합의 :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 (2015.6.28)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에너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자원순환기본법’(2016년)을 제정하고,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기본법 본격 시행 시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 대처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규제 합리화

- 순환자원인정제 도입 (일정기준 충족시 폐기물제외)
- 재활용시설 설치 규제 완화

재활용산업 육성

-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 재정 및 기술 지원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성과관리

- 기술수준, 업종 특성 고려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 순환자원 사용 확대

매립소각부담금

- 재활용가능자원 단순 매립 소각을 줄이고 선순환 유도

2.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15년 말까지 수립한다.

3.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 수송도로 환경개선 및 수송차량 밀폐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15년 말까지 수립한다.

※ “자원부국으로 가는 길...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제하의 보도자료(2016. 5.27) 중 발취

※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중 “Ⅱ.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2015. 6.28)

3. 3개 시·도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무시가 낳은 결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

그러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합의 취지가 반영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2016. 5.29 제정·공포) 중 목적

또한 정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70.3→82.0%, 최종 처분을 9.1→3.0%” 목표를 세웠다.

1. 비전 및 전략

비전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목표

<폐기물 발생량(원단위)>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20% 감축	70.3 → 82.0%	9.1 → 3.0%
* 95.5 → 76.4 톤/실의 원		

핵심전략 및 단계별 추진과제

-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순 과정 순환이용 체계 구축
- ◎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품질 물질 재활용 촉진
- ◎ 국민 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별 폐기물 처리 최적화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중 비전 및 전략(p39)

지표명	단위	2018	⇒	2022	⇒	2027
·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	15		10		0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중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지표(p74)

그리고 올해 초 생활쓰레기 직(直)매립 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 당시 매립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더 증가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시한은 다가왔다. 이에 다급해진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목전에야 부랴부랴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함에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갈등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

4. 3개 시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 vs 환경부 “자치사무”

그렇다고 3개 시·도의 해결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지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2018)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개 의제를 협약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고려한 것이었다.



(2018-06-04)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23>


당선된 세 단체장들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총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면 환경부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2019-01-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82117005&code=620104

(2019-05-06)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212>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2019.9.25)을 발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소각처리 돼야할 폐기물이 직(直)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 문제 인식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이해주체 간 이견·갈등으로 지연된 것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요구하였다.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

2019. 9. 25 (수) / 경기

첫째,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의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후에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한다.

넷째,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5. 인천시 '2025년 종료' 시간적 개념 vs 정부의 '직매립 금지' 공간적 개념, 상충!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하여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제도도입 이후	
경제적	천연자원 고갈로 자원 해외 의존도 증가 <small>(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 수입 중)</small>	순환자원 이용확대 <small>(연간 재활용량 1천만톤 증가)</small> → 1조 7천억원 재활용시장, 약 1만개 일자리 창출	
환경적	매립지 잔여 용량 감소로 쓰레기 대란 우려	매립소각부담금 부과로 매립량 감소 → 매립장 수명 연장	
사회적	매립지 주변 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 반대 심화	주변환경개선, 지역주민 지원 → 배출자와 매립지 주변 지역간 상생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 기자회견 내용 및 인천시장의 쓰레기 독립선언 기자회견(2020.10.15)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종료”라는 당장의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정부는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처럼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

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하였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이견,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란,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넘비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란 무책임한 행정과 당장 자신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